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폐막... 관람객 44만명 방문

국내외 20개국 83명 작가·팀 참여...300여점 작품 선보여 세계 유일 수목 비엔날레...국제 교류·예술적 위상 높여

두 달간 남도의 하늘과 바다를 수목으로 물들였던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관람객 44만명을 기록하며 전통 수목의 세계화와 전남 문화예술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 채 지난 10월 31일 막을 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 - Somewhere Over the Yellow Sea'를 주제로 국내외 20개국 83명의 작가(팀)가 참여해 3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통 수목의 미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전남 예술의 세계화'를 보여준 자리였다.

행사는 해남·진도·목포 등 전남 서남권

일원에서 열렸으며, 해남은 '뿌리', 진도는 '줄기', 목포는 '세계화의 지점'으로 설정한 입체적 전시 구성으로 수목의 변천과 확장을 시각화했다.

특히 해남 고산윤선도박물관에서는 조선 후기 대표 수목화가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 진본이 최초로 공개돼 관람객의 발길을 이어졌고, 진도 남도전통미술관에서는 이응노·서세옥·박생광·황창배·송수남 등 한국 근현대 수목화의 기장 5인을 조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목포실내체육관을 새 전시관으로 꾸민 현대전시관에서는 한지를 오브제로 활용한 전광영의 '집합 001-MY057', 유양장

치와 먹물로 노동자의 형상을 표현한 폴란드 작가 프세미스와프 아시엘스키의 'remember(me)', 레고로 '몽유도원도'를 재현한 황인기의 '오래된 바람' 등 실험적 작품들이 수목의 경계를 확장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회화에 국한되지 않고 설치·미디어아트·영상 등 동서양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결합해 '수목의 새로운 물결'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술계는 "서구 중심의 비엔날레 속에서 동아시아 미학을 집중 조명한 세계 유일의 전시"라며 "전통 수목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한 기념비적 시도"라고 호평했다.

또한 학술·교육·체험이 결합된 융합형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전통의 혁신과 재료의 확장'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는 한·중·일 전문가 9명이 참여해 수목예술의 세계적 확산 전략을 논의했고, 전남대·목포대 학생 대상 특

강에서는 전시기획 경험과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공유했다.

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인생네컷', '캐릭터 인형 포토존', 카페테리아 등 체험형 콘텐츠도 운영돼 대중 친화적 접근을 강화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비엔날레는 전통 수목의 정신을 현대기술과 문화가 만나는 지점으로 확장시킨 전환점"이라며 "세계 유일의 수목 비엔날레로서 국제적 교류와 예술적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전남문화재단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2027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준비 착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 추진(2026년 착공) △국제 수목 교류·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중장기 발전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상·하수도 요금 인상 이달부터 ㎡당 40~60원

광주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해에 이어 이달 9%가량 인상된다.

2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11월 검침분부터 적용돼 12월 고지서에 반영된다.

가정용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당 기존 580원에서 640원으로 60원 오르고, 하수도 요금은 430원에서 47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광주시는 상·하수도 누적 적자가 지속되자 지난해 2017년 이후 7년간 동결했던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요금이 생산·처리 원가의 약 65% 수준에 머물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해마다 9%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 계획이 모두 마무리되는 2027년에는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이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560원가량 추가 부담될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또 이번 조정에서 용량별 3단계로 구분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폐지하고, 단일 요금체제로 전환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지난해 확정된 요금 인상 계획의 연차별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요금 변동 사항을 개별 세대에 안내문으로 고지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책 읽는 동구' 1일 오후 전일빌딩 245 앞 쉬자임 구간에서 열린 인문도시 동구 '책 읽는 동구' 사업 결과 전시회를 찾은 임택 동구청장과 주민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정진욱 “지산지소 기반 에너지 신도시가 성장동력”

국정과제 'RE100 산업단지'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지원하고,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산업·에너지·생활 전반에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신도시(地産地消 지산지소)' 모델을 구축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RE100 확산·탄소중립 실현·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100산단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업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

성하고 지역 내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양하고 폭넓게 마련됐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부담금 감면, 송배전망·변전소·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비 지원, 망 사용료 및 재생에너지 구매비용 보조 등의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의료·복지시설 설치 특례 등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한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제도 마련된다.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가 단지 지정 및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부 내 추진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입업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

관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지정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지정된 입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적용되는 전력요금 등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AI산업의 고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연계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설계형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각 지역이 단지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대한민국 산업지도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산업·생활 순환형 산업모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박수기 시의원, '연결의 정치' 북콘서트 성료 시민·청년 등 참여 '대화의 장'...다양한 현안 논의

박수기 광주시의원(사진)의 정치철학을 담은 저서 '연결의 정치' 출간을 기념한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는 민형배 국회의원(박수기 의원 후원회장), 박균택 국회의원,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시민 등 1000여 명이 넘는 참석자가 자리를 메워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 우원식 국회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주당 원내대표, 한준호 최고위원, 추미애 국회의원, 김경호 국회의원 등이 각각 영상과 축전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박 의원의 정치적 철학과 실천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박수기 의원은 실력과 현장 경험으로 증명하는 정치인"이라며 "연결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격려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박 의원은 지방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천형 정치의 표본"이라며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잇는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수기 의원은 "깊어진 대화와 분절된 제도를 다시 잇는 것이 연결의 정치"라며 "도시의 발전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에서 완성된다. 정치의 본질은 사람을 잇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콘서트는 단순한 출판 행사를 넘어 '도시의 미래와 연결의 정치'를 주제로 시민과 청년, 전문가가 함께한 대화의 장으로 꾸러졌다.

청년정치, 지역 균형발전, 산업·문화·환경의 연계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이 현장에서 논의됐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사물주소판' 1299개 설치

전남도가 도민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사물주소판' 1299개를 새로 설치하며, 주소 기반의 위치 관리 체계를 본격 강화한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없는 시설물에도 고유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로, 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경찰 등 구조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사물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

(www.juso.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향후 티맵·카카오맵 등 민간 지도 서비스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무더위쉼터, 전기가 충전소, 버스·택시 승강장 등 공공시설 23종 2만4020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이 가운데 1만여 개 시설에 주소판을 설치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나주시·신안군, 농촌공간 기본계획 확정

나주시와 신안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나주시와 신안군, 전북 순창군,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 등 5개 시·군이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나주시는 '농촌다움과 도시적 편의가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 나주'를 목표로, 동·서·남부권에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개발 압력을 분산시키고 나주배, 멜론, 청양고추 등 지역특화작물의 유통합화를 추진한다.

신안군은 '사람과 자연, 경제가 순환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에코 스마트 신안'을 목표로, 섬의 자연경관과 유산을 활용한 정원화 사업, 빈집 재활용을 통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에 나선다.

순창군은 '생활·정주·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비전으로, 북서부 복흥·쌍지·구림면 등 서비스 소외 지역의 생활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류산업과 치유관광 등 지역 전략산업을 고도화한다.

농식품부는 모든 시·군이 내년까지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모든 시군이 내년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